

# 아동이 존중받는 육아정책

박상희 소장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하에 4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라는 기치 아래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유아에서 대학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부모의 육아권, 노동권, 아동의 행복권 보장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았다.<sup>1)</sup> 또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양육지원체계 개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제도적으로 큰 틀을 구축하여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sup>2)</sup>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휴가 확대를 통한 일·가정양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 △공공립기관 확충, △가정 양육지원 확대, △아동수당 도입과 확대 등 육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핵심 방향으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sup>3)</sup>.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육아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2018년부터 5년 연속과제로 「2018-2022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를 통해 정부의 육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육아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

1) 최윤경(2020).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9년 전문가·부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 Brief, p.1.

2) 김근진·박창현·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와 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3.

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8326&topic=&pp=20&datecount=&recommend=&pg=\(2021년 12월 1일 검색\)](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8326&topic=&pp=20&datecount=&recommend=&pg=(2021년 12월 1일 검색)).

하고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추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육아정책포럼 겨울호에서는 「2018-2022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의 2021년 부모, 전문가, 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정책동향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관련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요약·발췌하여 소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간 지속되면서, 육아정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긴급 돌봄 문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문제, 저소득가정의 아동 학습격차 해소 문제 등이 육아정책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에는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이 긴급한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맞맞추어 정부에서는 아동 학대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집중 대응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개최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up>4)</sup>.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행복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로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아동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정책인데도 아동을 동등한 수혜자로 인정하며 내세운 공약은 미진해 보인다. 아동이 태어나 행복하게 배우고 놀며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영유아를 위한 최종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복권이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1월 18일). 유엔(UN)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w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507](http://www.mohw.go.kr/react/al/sal0301w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507)